

김대중 前 대통령 國葬

무르익은 화해·통합 분위기 여의도까지 갈까

■ 향후 국회 정상화 어떻게

한 “고인 유지따라 의회주의 원칙 지켜야” 민주, 등원론 탄력속 “지금은 장례식 집중”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가 국회 정상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22일 미디어 관계법 처리 이후 얼어붙은 여야 관계가 김 전 대통령 장례 이후 서서히 풀려갈 것이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의회주의 신봉자였을 뿐 아니라 이번 서거로 사회 각계에서 통합과 화해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분위기상 유리한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장을 수송하는 등 김 전 대통령 장례를 최고 의 예우로 치러주면서 여권이 한나라당에 우호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기류가 이 대통령의 서민 행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서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김 전 대통령의 빈소가 국회에 마련되고, 국회에서 영결식을 거행하기로 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이 의회주의자인 만큼 국회도 의회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전혀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법 등과 관

련, 민주당과 협상 카드가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정치공세를 자제하면서 민주당의 등원만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 = 고민이 깊다. DJ 서거는 분명히 한나라당에 위협적인 상황

이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DJ 서거로 민주당이 추진하던 장외투쟁의 색이 바랬고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대한 여론도 잠잠해졌다. 더욱이 DJ 서거로 형평성 화해·통합 분위기는 장외투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당내에서도 등원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등원을 해서 인사청문회·국정감사 등 공식적인 국회 활동을 통해 대외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잦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장례 이후 등원하지 않으면 차치 등원의 명분을 아예 잃어버리고 9월 정기국회

동안 장외에서 지낼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DJ의 최측근인 박지원 의원이 최근 정책위의장으로 당 지도부에 편입된 것도 등원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박 의원은 정책위의장 인선 직후 “야당의 강력한 투쟁장소는 국회다. 내 소신은 원내투쟁이 우선이고 때론 내부비판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등원론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장외투쟁의 성과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로 되돌아갈 경우 한나라당에 정국의 주도권을 넘겨준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DJ의 동고동락과 YS의 상도동계가 중심축을 이뤘던 '민주화추진협의회' 인사들이 지난 21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박희부 민주협 부이사장,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 김상현 민주당 상임고문, 박찬중 전 의원,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 /연합뉴스

“아버지 때문에 고문받아 항상 미안했다”

DJ의 애뜻한 부정... 병상 장남 수시로 찾아 격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이 휠체어를 이용, 입관식과 운구 행렬에 나서는 등 어느 정도 건강을 되찾은 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애뜻한 부정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김홍일 전 의원 측근에 따르면 지난해만 해도 지방인 파킨슨 병이 심화된 데다 운동 부족으로 당뇨 등 합병증이 겹쳐 김 전 의원의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해 등에 욕창이 생기는 등 사실상 건강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이 지난해 김 전 의원의 병상을 수차례 방문,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한 아들의 모습에 눈시울을 붉히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빨리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고 호소할 뒤편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병세 악화로 음식을 거의 섭취하지 못했던 김 전 의원은 아버지의 병문안 이후, 건강 회복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올해 초부터 미음을 시작으로 식사를 어느 정도 소화시키기 시작, 점차 몸을 일으켜 세우는 등 건강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 것. 김 전 대통령은 자신 때문에 군사정권의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들에 대해 항상 미안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의원은 아버지의 건강 악화 소식에 의료진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나 병문안에 나섰으며 당시 이회호 여사는 병상에 누운 김 전 대통령에게 “홍일아도 건강이 좋아져서 이렇게 병원까지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식 당시 풍채가 좋았던 김홍일 전 의원(왼쪽). 오른쪽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빈소를 지키고 있는 김 전 의원.

왔다. 빨리 일어나라”고 호소했다.

특히, 건강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김 전 대통령의 임종 순간, “아버지”를 세 번 불러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김 전 의원은 입관식과 운구 행렬에도 나서는 등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했다.

김 전 의원 측근 인사는 “지난해만 해도 김 전 의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김 전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애뜻한 부정과 김 전 의원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주위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헌정권 비난한 셈” “예민한 것 다 뺐다”

■ DJ 일기장 공개 여야 미묘한 신경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기가 공개되자 정치권은 22일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 전 대통령의 일기 내용 중 용산 참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수사와 서거 등을 언급하며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담긴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은 용산 참사와 관련

“참으로 야만적인 처사다. 이 추운 겨울에 쫓겨나가는 빈민들의 처지가 너무 눈물겹다”고 했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는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은 강요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규정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장 분위기를 감안해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과거 김 전 대통령이 생존할 당시 다 나왔던 내용”이라며 더 이상의 확대 재생산을 경계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인간적 고민을 느끼게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또 여권에 서 고인의 고민을 느끼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개된 부분이 대체로 부부간 애뜻한 사랑 이야기 등 개인적 감상이고 예민한 부분은 오히려 상당히 배제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기 공개를 불편해하는 것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화해와 통합은 반성의 기반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 서거와 용산참사 등은 여권에 큰 잘못이 있는 것을 김 전 대통령이 지적한 만큼 스스로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고인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가세했다.

이회호 여사 경호 경찰이... 비서관은 철수

■ DJ 서거 유족 예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따라 이회호 여사 등에 대한 예우도 상당한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행정안전부와 동교동 측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라 이회호 여사 등 유족들에 대한 예우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다.

일단,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당사자의 서거로 유족 가운데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다만 연금 형식이 유족 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연금 금액은 당시 대통령 보수 연액의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70으로 감소되어 지급된다.

경호 문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는 퇴임 후 7년 동안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가 지원되며 전직 대통령이 서거

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경호는 퇴임일로부터 2년간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회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는 김 전 대통령 영결식 이후 사실상 끝나게 되며 이후 경찰 측에서 주요인사 관리 차원에서 경호를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전직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 3명을 비서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나 서거 시에는 더 이상 둘 수 없다. 따라서 최경환 비서관 등은 물러나게 된다.

한편, 김 전 대통령 유족들과 동교동 측에서는 장례 비용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지고 있지만 규정 이외의 비용은 국가에서 보전해주지 않고 유족 측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대중 전 대통령님!

인권과 명화를 사랑했던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동행지족은명

발칙과 침묵

광주광역시 동구 동남성로길 1-8
T. 010-7022-0000-0000

1. 김대중 전 대통령님에 대한 존경과 애도를 표합니다.
 2. 인권과 명화를 사랑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3. 김대중 전 대통령님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표합니다.
 4. 김대중 전 대통령님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표합니다.